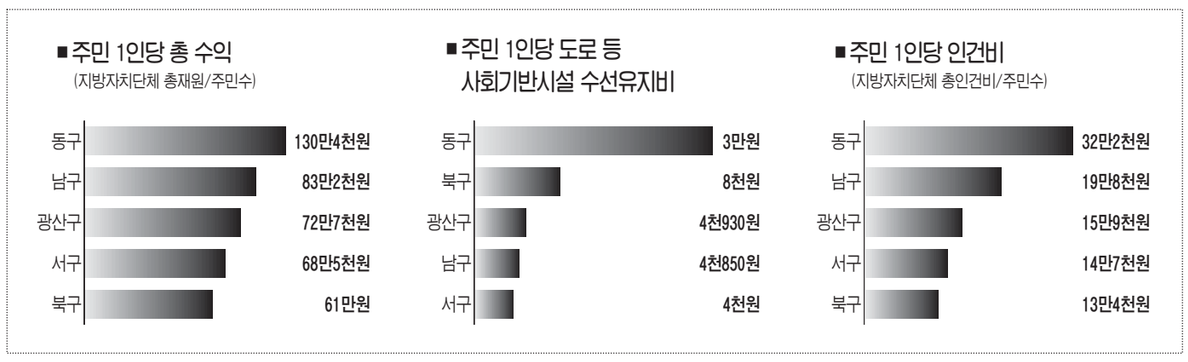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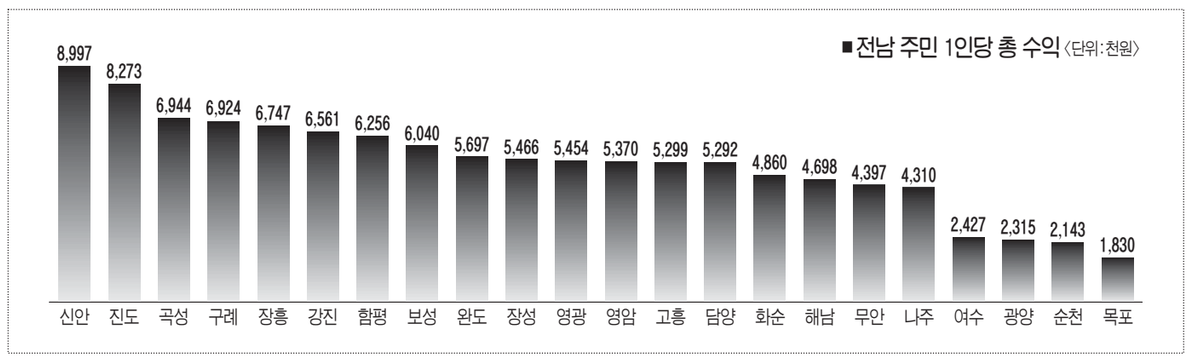
부채비율 높아 기업유치 등 세수확보 급하다





광 주

지난해 광주시의 재정상태는 지난 2007년에 비해 35개 지표 중 거의 전 부문에서 향상되고 있었다. 거기에 성장성 지표인 순자산 증가율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 광주시의 성장가능성은 그 어느 광역단체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낮은 정부지원을 늘려 주민 1인당 총수익을 높이고, 주민 1인당 총부채, 부채 비율, 유동성 비율 등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향후 과제로 부각됐다. 이와 함께 비용 측면에서도 행사비 등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다른 광역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기관 지원 및 기초자치단체 지원 등을 증액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지표 광역단체중 중위권=이번 자료 분석에서 드러난 광주시의 거의 모든 재정지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민 1인당 정부지원수익과 총수익을 높이는 방안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은 파이'를 인건비나 사회기반시설 투자비, 각종 지원금 등으로 나누면서, 당연히 비용지표나 효율성(생산성) 지표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 이외에 15개 광역자치단체보다 크게 열악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용지표 중 주민 1인당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와 주민 1인당 의료기관

총수익보다 지출 많아 정부지원 더 늘려야

지원금, 공무원 1인당 행사비 등을 들 수 있다. 총수익이 작아 주민 1인당 돌아가는 비용이 작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민 1인당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는 1만9천400원에 불과해 16개 광역단체 평균(이하 평균)인 2만8천900원보다 크게 낮았으며, 주민 1인당 의료기관 지원금(의료기관 운영비를 주민 수로 나눈 값)은 400원에 불과해 평균인 1만3천300원에 비해 수십 배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공무원 1인당 행사비(시가 주최 또는 참여하는 행사 개최 및 지원을 위한 경비를 공무원 수로 나눈 값)는 380만2천600원으로 평균인 279만1천900원을 크게 넘어섰다. 따라서 소모성 경비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효율성 지표 중에서는 총수익 대비 총비용 비율, 총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총수익 대비 기초자치단체 지원금 비율 등이 모두 평균보다 낮았다. 총수익 대비 총비용 비율은 84.25%로 평균(89.23%)에도 못 미쳐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쓰는 비용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총수익 대비 인건비(공무원 등 지방자치단체 고용인에게 지급되는 비용) 비율은 8.28%로 평균(7.50%)보다 높았다.

건전성 지표인 부채 비율(총부채를 순자산으로 나눈 값)은 7.19%로 평균인 6.54%를 초과했으며, 유동성 비율(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을 단기부채인 유동부채로 나눈 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단기부채상환능력이 높음)은 347.28%로 평균인 650.55%의 절반 정도였다. 이는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10위에 해당된다.

◇각 자치구 분석=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 주민 1인당 총수익이 가장 높은 곳은 동구로, 130만4천원을 기록했다. 인구가 가장 적은 반면 상업시설이 집중돼 있어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21만원)과 주민 1인당 국비 등 정부지원수익(109만2천원)이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가장 인구가 많은 북구는 61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남구가 83만2천원, 광산구 72만7천원, 서구 68만5천원이었다.

주민 1인당 총수익 동구 최고 북구 최저

주민 1인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인건비도 동구가 35만2천원으로, 5개 자치구 평균(이하 평균) 19만8천원의 2배 가까운 액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남구(19만8천원), 광산구(15만9천원), 서구(14만7천원), 북구(13만4천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동구가 1인당 총수익은 높은 반면, 그에 반해 인건비로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는, 고비용 저효율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주민 1인당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도 동구가 3만원으로, 평균(1만원)의 3배에 달했다. 북구는 8천원, 광산구 4천930원, 남구 4천850원, 서구 4천원에 불과했다. 이는 동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에서 도로나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사용하는 재정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수익 대비 총비용 비율에서는 북구가 90.4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나머지 남구(84.63%), 광산구(84.21%), 서구(82.70%), 동구(82.45%) 등은 평균(84.89%)보다도 낮아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쓰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위험 정도를 보여주는 부채비율에서는 동구가 4.15%, 남구가 3.92%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평균(3.40%)를 넘었으며, 서구(3.39%), 북구(3.20%), 광산구(2.37%)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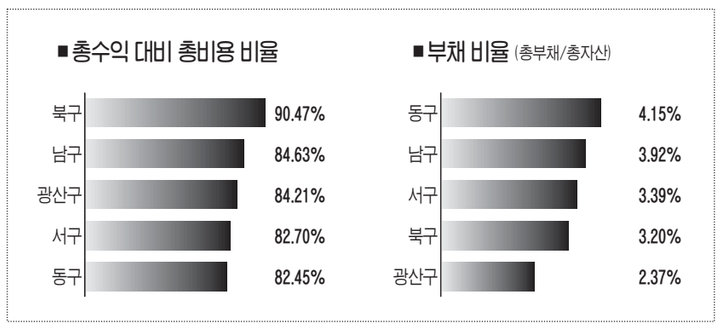
재정지표의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순수익 증가율(당기수수익-전기순수익/전기순수익)에서는 단연 광산구와 남구가 돋보였다. 광산구와 남구는 무려 373.

재정상태 개선 없을 땐 비용·비효율성 더 악화

99%, 343.90%로 나타나 평균인 191.51%를 훌쩍 넘어섰으며, 서구(133.27%), 북구(60.13%), 동구(46.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방재정 평가분석을 맡은 프레시안과 희망제작소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는 각 지자체가 2008년과 2009년에 공개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단순 오류는 수정했으나 각 지자체가 공개한 재무제표 값을 그대로 이용했다"며 "주민 수(외국인 수 제외)와 세대 수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의 자료를 활용했으며, 공무원 수의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2008년과 2009년에 발표한 재무분석결과 상의 숫자를 역으로 추산해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상 첫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 모든 지표 '주민중심'으로 분석

■재정평가 어떻게 했나

15일 공개된 '지방재정평가 2009'는 인터넷신문 프레시안과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프레시안 지방재정평가단이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지방자치 14년을 맞이해 최초로 실시되는 외부 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평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으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개 기초자치단체 지표분석 결과 평균값을 구해 자치단체 별 순위를 매겼으며, 모두 1천20개 도표로 정리했다. 2007년과 2008년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석/박사급 연구자 15명이 참여해 3개월의 준비기간과 3개월의 분석기간을 거쳐 완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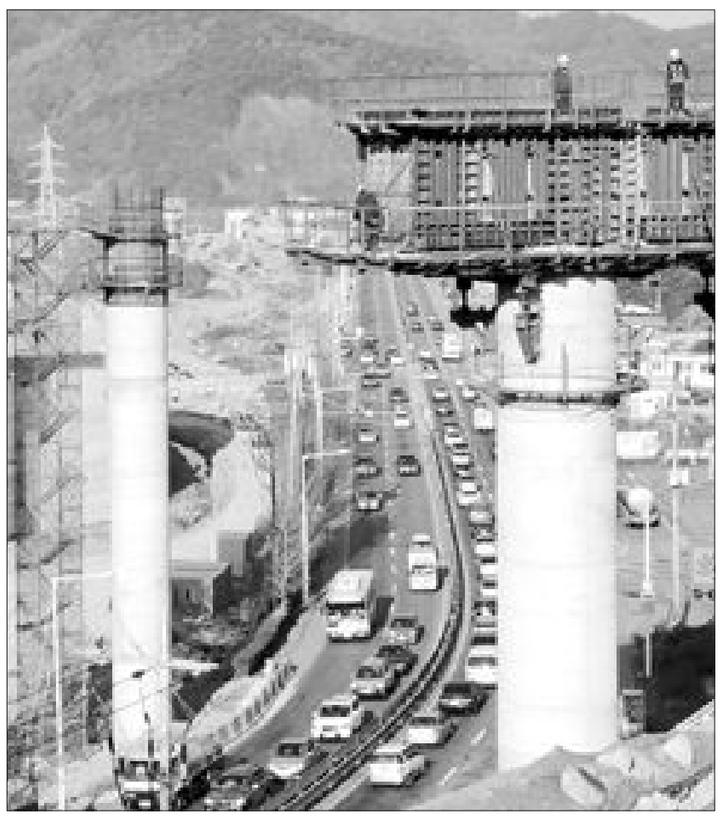
이번 자료 분석의 목표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태 양호한 지 여부를 누구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방재정평가는 해당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에 의해 이뤄졌으나, 지자체의 실질적인 주인인 주민들이 배제되고, 기준이 모호했으며, 실용적인 정보를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방재정평가 2009'는 수익지표, 비용지표, 효율성 지표, 건전성 지표, 성장성 지표 등 모두 33개(광역 35개) 평가지표로 나눠지며, 수익지표로는 주민 1인당 총수익, 자체조달수익, 정부지원수익 등이, 비용지표로는 주민 1인당 공무원의 인건비, 주민 1인당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주민 1인당 의료기관 지원금 등이 사용됐다. 또 효율성 지표는 총수익 대비 총비용 비율, 총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총수익 대비 운영비 비율 등이며, 건전성 지표는 주민 1인당 총자산, 주민 1인당 총부채, 세대당 이자비용 등, 성장성 지표는 순자산 증가율, 자체조달수익 증가율, 순수익 증가율 등이다.

이번 자료는 모든 지표를 주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주민 1인당 총수익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수익, 즉 자체조달+정부간 이전수익+기타수익을 주민 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자료 분석을 맡은 프레시안과 희망제작소 측은 "순위에 대한 해석은 신중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의 특수상황 등을 두루 감안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 지방재정 평가결과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지원 증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광주~화순간 도로확장 공사 현장.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 남

지난해 전남도 재무상태를 통해 본 전남도민 1인당 총수익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등 수익지표 부문에서 소폭 향상 됐으며, 부채비율과 주민 1인당 총부채 등 재정 건전성 지표도 전국 상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순자산 증가율·자체조달 수익 증가율 등 성장성 지표 부문에서도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상위권을 차지해 재정상태의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재무상태 양호하나 정부 의존도 전국 1위

다만,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2위를 차지한 주민 1인당 총 수익 중 주민 1인당 자체조달 수익은 15%에 불과한 반면, 정부지원 수익이 85%를 차지해 정부지원 의존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 1인당 자체조달 수익을 늘리는 방안이 향후 전남도 재정 건전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비용지표에서는 주민 복지와 생활편의에 대한 비용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반면 공무원 비용구조는 상대적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 복지 및 편의시설 관련 비용 구조를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지원 의존도 매우 높아=지난해 전남도민의 1인당 총수익은 228만5천900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 중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총 수익의 85%가 정부지원 수익이었으며, 주민 1인당 자체조달 수익은 31만9천400원으로 전국 평균(74만100원)에 훨씬 못 미쳐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5위를 차지했다. 전남도의 재정이 대부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셈이다. 주민 1인당 총자산과 총부채, 가구당 이자비용, 부채비율과 유동성 비율 등 건전성 지표 부문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효율성(생산성) 지표인 총수익 대비 총비용 비율과 기초자치단체 지원금 비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반면 주민 1인당 편의시설 규모, 교육기관 및 사

1인당 부채 비율 신안·무안 가장 높아

회보장 지원금 비율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지표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또한, 비용지표에서도 주민 편의 및 복지 구조는 열악했지만 공무원 비용 구조는 상대적으로 건전해 공무원 중심의 비용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민 1인당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는 1만2천300원으로 전국 평균 2만8천9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주민 1인당 의료기관 지원금과 교육기관 지원금은 각각 590원, 7만5천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의료기관·교육기관 지원금은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인 15위를 기록했다.

1인당 사회보장금 지원금 또한 2만9천300원으로, 전국 평균 10만5천400원에 비해 20%에도 못 미쳤다. 반면, 공무원 1인당 도서구입 및 인쇄홍보 광고비는 290만4천500원으로 전국 평균(200만7천원)을 훨씬 웃돌면서 전국 광역단체 중 1위를 차지했고, 공무원 1인당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도 331만100원으로 전국 평균(276만7천300원)을 웃돌면서 전국 광역단체 중 4위에 랭크됐다.

◇자치단체 분석=전남지역 22개 자치구 중 주민 1인당 총수익이 가장 높은 곳은 신안군으로 899만7천원을 기록했다. 인구가 적었지만 도서지역이 많아 정부지원 수익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목포시는 183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 22개 자치구의 주민 1인당 총 수익은 정부지원 수익이 높은 도서지역이 상위권에 랭크됐지만 정부지원 수익이 낮은 목포와 순천시, 광양시 등 도시권이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그만큼 정부지원 수익 의존율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주민 1인당 인건비도 구례군(116만원), 곡성군(114만2천원), 신안군(10만5천200원) 등이 1~3위를 차지하는 등 도서·산간지역의 인건비가 높았고, 목포시(32만7천원)와 천시(34만6천원), 광양시(38만4천원) 등이 최하위를 맴도는 등 도시지역은 상대적 낮게 나타났다.

공무원 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는 완도군이 606만9천원으로 22개 자치구 평균 423만1천원을 훨씬 웃돌면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진도군(532만9천원)·신안군(514만5천원)· 해남군(506만7천원)·강진군(482만4천원) 등으로 8개 군이 평균을

주민복지 비용보다 공무원 인건비 많아

웃돌았다.

반면 장성군은 289만9천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구례군과 광양시가 각각 21위와 20위를 차지했다.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되는지 보여주는 효율성(생산성) 지표 중 총수익 대비 총비용 비율은 목포시가 79.1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고흥군(76.39%), 순천시(73.89%), 광양시(73.13%), 화순군(72.42%), 보성군(71.18%), 곡성군(68.10%), 장흥군(67.46%), 함평군(67.23%), 여수시(67.11%), 나주시(66.49%)로 11개 시·군은 22개 자치구 평균을 넘어섰지만, 최하위인 진도군(52.59%) 등 평균을 밑도는 나머지 11개 시·군은 수익에 비해 쓰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위험 정도를 보여주는 부채비율에서는 목포시가 4.89%, 여수시 4.76%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평균 2.09%를 넘었으며, 평균을 웃도는 자치단체는 6곳이었다.

주민 1인당 총 부채는 신안군이 127만8천원, 무안군 101만6천원으로 100만원을 웃돌면서 22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부채를 지녔으며, 보성군이 10만9천원으로 부채가 가장 적었다.

재정지표의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순수익 증가율 부문에서는 곡성군이 54.94%로 돋보였다. 이어 함평군(47.85%), 순으로 조사됐으며, 22개 자치구 평균(10.79%)을 웃도는 자치단체도 12곳에 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